4·13 총선
주요 정당 공약분석

2016. 4.

바른사회시민회의
이옥남·김도연

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사회
CITIZENS UNITED FOR BETTER SOCIETY

Ⅰ 4·13 총선 주요 3당 공약 분석 개요

4·13 총선을 얼마 앞둔 시점에서 주요 정당들은 당 차원의 공약을 일제히 발표했다. 공직선거법 제66조에 의하면 선출직 공직자의 선거공약서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여야 하며,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선출직 중 국회의원 후보만 예외적으로 공약내용이나 재원조달방안 등에 대해 법적인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유권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구의 후보 정보 중 후보가 내세운 공약은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다.

그나마 당 차원에서 각 정당은 정책공약집을 발표했지만, 내용이 방대하고 공약의 이행절차, 기한 및 재원조달방안 등이 치밀하지 못한 상황이다. 공약의 실천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은 새누리당 56조원, 더불어민주당 147.9조원, 국민의당 46조 2500억 원이라고 정당 스스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재원조달 방안 및 추진 계획에 있어 유권자들은 의구심만 더 해 갈 뿐이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4·13 총선을 맞이하여 유권자들에 정보제공의 차원에서 주요 정당(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당 차원에서 제시한 공약을 비교· 분석하여 발표하고자 한다.

Ⅱ 4·13 총선 공약 분석 결과

1. 재탕공약

이번 총선은 선거구 획정이 법정시한을 넘기고 각 당이 공천문제로 인한 논란을 일으킴에 따라 공약의 정책적인 논의는 거의 배제되었다. 선거일정에 떠밀려 공약을 발표함에 따라 급조된 공약 또는 19대 총선 내지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미 발표되었던 일명 '재탕공약'이 등장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제시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관련 공약은 이미 제19대 총선에서 제시한 바 있으며 이번 총선에서는 3당 모두 같은 공약을 제시했다. 연도별 '어르신일자리 확대' 공약은 제18대 대선 공약과 유사하다. 그 외 '영아종일 돌봄서비스', '고교무상교육단계적 실시', '제도 교육 밖 청소년 지원',

‘중소기업취업자 중 저소득층 지원’, ‘장애교학생 교육 향상’, ‘장애인 교통수잔 지원’, 무료지상파 채널 EBS-TV(교육방송) 내실화 통한 사교육비 부담완화‘, ’기부연금제도 도입‘ 등은 제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에서 제시한 공약과 거의 유사하다(【표 1】 참조).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특수고용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산재보험을 의무화하여, 일할 권리와 다치면 보상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공약은 제18대 대선 당시 새누리당의 ‘특수고용직 근로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확대’와 유사하다. ‘밭농업직불제 100만원으로 인상 등 직불제 확대’는 제18대 대선 당시 새누리당 공약 ‘고적직불금을 현재 ha당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여 직불금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기여’한다는 공약과 유사하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등 상품권 사용편의성 추진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공약은 제18대 대선공약의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사용의 편의성을 높여 전통시장 활성화’시킨다는 공약과 거의 유사하다. ‘한부모·조손가족 지원 강화’ 공약은 제18대 대선 새누리당 공약 ‘한부모가족과 한부모 가족으로 이원화되어 잇는 복지시스템을 일원화’ 시킨다는 것과 유사하다(【표 1】 참조).

‘공공부문 일자리 34만8천 개 창출 공약’은 제18대 대선 공약 ‘공공서비스부문 일자리 40만개 창출’ 공약과 유사하며, ‘공공부문 청년고용의무 할당율을 3%에서 5%로 상향시킨다’는 공약은 제19대 총선 공약의 ‘현행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해 3% 이상씩 청년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을 300인 이상의 민간기업과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3% 할당한다’는 공약과 유사하다. ‘재벌총수 일가의 부당한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적은 지분으로 책임지지 않는 황제경영 방지’ 공약은 제19대 총선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지주회사 행위규제강화와 금산분리 강화’ 공약과 각 론에서 유사하다. ‘많이 버는 기업이 더 내는 사회 만들기’ 공약은 제19대 총선 ‘법인세 과표 500억원 초과 시 25%세율 적용 및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 대한 법인세강화’ 공약과 유사하다(【표 1】 참조).

그 외 더민주의 제20대 총선 공약 중 ‘0~5세 보육·교육 100% 국가책임’, ‘난임 지원 대상과 범위 확대’, ‘장애인 주거지원 및 건강지원’,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직업군인의 복지 개선’, ‘언론의 자유와 독립 회복’ 등은 제19대 공약집에 포함되었다. 국민의당 ‘국민연금 양육크레딧 도입’은 민주통합당 제19대 공약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확대’ 공약과 유사하다(【표 1】 참조).

【표 1】20대 총선 공약 중 이전에 나왔던 '재탕 공약'

정당	제20대 총선 공약	비고
새누리	• 시니어 재능기부 활성화 통합플랫폼(시니어 재능기부 뱅크) 및 대기업 CSR(사회공헌)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 다양한 시니어 재능기부 봉사단 통합(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SE 브리지센터 설립)	• (19대 총선 공약) 어르신의 일자리 확대 및 활발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노인이 자원봉사활동(노-노 및 재능기부 서비스), 능력 무상기부할 경우 복지점수를 부여해 관리하고, 노인 본인이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무상으로 사용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확대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활성화(경력개발형 새일센터 확대, 고부가가치 직종 여성전문인력 양성확대 운영 등)	• (19대 총선 공약)30-50대 여성을 위한 재취업 및 창업지원(전업주부 및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 새로운 일 센터 확대)
	• 장년 근로자의 생애고용 지원 강화, 장년 구직자의 취업지원서비스 접근성 제고(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확대), 임금피크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 및 도입률 제고를 통한 60세 정년제 안착 기대.	• (19대 총선 공약)정년 60세 의무화 단계적 추진 및 임금피크제 활성화, 정년연장 법제화와 임금피크제 연계를 법적으로 강제하도록 규정, 장년층 대상 '취업성공패키지사업' 확대, 사회공헌일자리, 50+새일터 적응지원 확대 등 '장년 희망찾기'사업 확대
	• 활기차고 젊은 전통시장을 육성 - 주차빌딩 건립 등으로 주차장 보급 확대 - 모바일을 이용한 혁신점포 지정 등 ICT화	• (18대 대선 공약)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 대폭 확대 • 전통시장 포털시스템 및 U-전통시장을 구축(인터넷 쇼핑몰)
	• 지역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신고소득으로 바꾸고 서민의 자동차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은 단계적인 감소를 추진, 저소득 지역 가입자는 신고된 소득을 그대로 인정하여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 자동차나 재산, 가족의 경제능력 등을 감안한 평가소득은 제외.	• (19대 총선 공약) 공평한 보험료 조정, 전 ·월세금 공제, 저소득 지역 가입자의 자동차보험료 부과기준을 조정하여 보험료 부담 완화
	• 우울, 치매, 학대 등 요보호노인 대상 주·야간보호서비스 병행	• (19대 총선 공약) 치매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확대와 돌봄서비스 확

정당	제20대 총선 공약	비고
		충, 우울증 등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정서적 안정감이 결여된 노인(127천명)에 대한 노인돌봄서비스 확충
	• 2017~2020년까지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매년 10만개씩 확대 공급 – 고령 어르신들을 위한 공익활동 매년 6만개씩 확대 – 어르신의 재능나눔은 매년 1만개씩 확대, 활동 지원기간 연장(현행 6개월→9개월)	• (18대 대선 공약) 2014~2017년 기간 동안 연간 5만개를 신규창출하여 노인 일자리 대폭 확대 공급 • 단순생계형 일자리가 아니라 노인에게 사회공헌 활동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 맞춤형 일자리 집중 개발, 보급 – 아동안전·돌봄, 다문화가족·장애인지원, 노-노케어, 지역사회 환경개선 등
		• (19대 총선 공약) 노인이 자원봉사활동(노-노 및 재능기부 서비스), 능력 무상기부할 경우 복지점수를 부여해 관리하고, 노인 본인이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무상으로 사용
	• 영아종일제: 현재 0세~1세(24개월)까지 지원하고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2세(36개월)까지 확대	• (19대 총선 공약) 0세아 아이돌봄 지원 확대
	•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은 낮추고, 학생들에게 고른 교육기회 확대. 국가 재정상황에 따라 도서벽지 등 교육 소외지역으로부터 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 지원비, 교과서 대금을 무상화하고, 향후 전국으로 단계적 확대 추진.	• (19대 총선 공약)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 단계적 확대, 도서 벽지 및 농어촌 지역(읍·면 지역)에 우선 적용 후, 정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고교 무상교육 확대 추진
	•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학업, 취업 등 지원 강화. 시도별 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통해 다양한 체험기회 확대 및 학력취득 지원.	• (19대 총선 공약) 제도교육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 제도 교육 밖에 있는 7만 여명의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 강화, 비인가 대안학교의 교육 내실화를 위한 필요 경비 지원 확대.

정당	제20대 총선 공약	비고
	• 중소기업 취업자 중 저소득층이 본인의 상환부담능력(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거치 및 상환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채무부담 완화	• (19대 총선 공약)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지원, 중소기업에 취업한 20~31세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재형저축 마련 및 세제혜택.
	• 장애학생 교육력 향상, 연차적 특수교사 증원 및 특수학교(급) 신·증설을 통해 특수교육의 질 향상 및 장애학생 교육력 신장 기대	• (19대 총선 공약) 장애인 정규 교육 강화, 향후 5년간 특수학교·학급 확충, 특수교원 7,000명 증원, 특수학교 전공과 설치 확대.
	• 교통수단 확충, 장애인 콜택시의 타지역 이동이 가능하게 하고, 광역이동지원센터도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후 법개정 추진	• (19대 총선 공약) 장애인 복지 내실화, 교통수단 확충(장애인 콜택시, 저상버스 운영규모를 법정 수준에 도달하도록 단계적 확충)
	• 기부연금제도 도입(제도 도입시 기부자 세액공제, 향후 연금수령시 저율과세 추진)	• (19대 총선 공약) 나눔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지속 추진 : 기부연금제도 도입
	• 무료 지상파 채널 EBS-TV(교육방송) 1개 추가, 서민층의 초·중등학생 교과목 학습용 프로그램과 영어학습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연간 1,800억 원 이상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	• (19대 총선 공약) EBS 프로그램 내실화로 사교육부담 완화, 과목별·수준별 학습사이트 개설 등 다양한 맞춤 연계식 EBS 프로그램 운영
더불어민주당	• 현행 법정근로시간 1주의 노동시간 한도 '휴일을 포함'한 52시간 법제화	• (19대 총선 공약) 주40시간제 확대적용과 주5일 근무 정착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 초과노동시간 제한(주12시간 한도)에 휴일특근 포함
	• 경찰·소방 등 안전 분야,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삶의 질 분야, 교육 분야, 신재생에너지 등 지속가능 분야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34만8천 개 창출 • 향후 3년 간 한시적으로 공공부문 청년 고용의무 할당률을 3%→5% 상향, 일정규모 이상 민간기업이 매년 정원	• (19대 총선 공약) 현행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해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을 300인 이상의 민간기업과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3%의 고용 할당을 의무화 • (18대 대선 공약) 공공서비스부문의

정당	제20대 총선 공약	비고
	의 3% 이상 청년을 고용하도록 하는 청년 고용의무 할당제 도입하여 25만 2천 명의 일자리 창출	'좋은 일자리' 창출 – 공공서비스부문 일자리를 40만개 창출 • 청년고용의무할당제와 고용분담금 도입 –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민간기업에 매년 정원의 3%씩 청년 고용을 의무화 –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고용분담금을 부과해 '청년고용촉진기금'으로 활용
		• (19대 새누리당 총선 공약) 공공기관 의무채용, 민간에 확대
		• (18대 새누리당 대선 공약) 경찰, 소방관, 복지 분야 등 일자리 대폭 확충
	• 3同원칙(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동일처우) 적용으로 비정규직 차별해소	• (19대 총선 공약)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통한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
	• ILO핵심협약 중 비준되지 않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제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제98호), '강제노동 협약'(제29호)과 '강제노동 철폐협약'(제105호) 비준	• (19대 총선 공약)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 맞는 ILO핵심협약 비준 및 국제노동기준 준수 –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 – 제9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 제29호, 제105호 강제노동관련 협약
	•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산재보험을 의무화하여, 일할 권리와 다치면 보상받을 권리를 보장	• (18대 새누리당 대선 공약) 특수고용직 근로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확대
	• 재벌 총수일가의 부당한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적은 지분으로 책임지지 않는 황제경영 방지 –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 구축(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행위규제) – 총수일가의 전횡을 막고, 투명하고 건	• (19대 총선 공약)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상호출자의 탈법적 회피수단인 '순환출자'금지 내용, '지주회사' 행위규제 강화와 금산분리 강화, '담합·납품단가 부당인하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한 규제 강화 , '기업범죄' 처벌 강화 등 내용 중복

정당	제20대 총선 공약	비고
	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법적 기반 구축(일감몰아주기를 규제,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 추진 등) – 산업자본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규제 강화 등 금산분리 원칙 준수	
	• 많이 번 기업이 더 내는 사회 – 과세표준 500억원 기업에 대해서 현재 세율 22%를 2009년 이전 25%로 원상회복 – 재벌 대기업 법인세 비과세·감면 축소	• (19대 총선 공약) 대법인에 대한 MB 감세 철회 : 법인세 과표 '500억원 초과'시 25%의 세율 적용 • (19대 총선 공약)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 대한 법인세 강화 : 대기업집단 계열회사에 대해 법인세 과세 강화
	• 중소상공부(가칭)를 신설하여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상생발전·동반성장 기반을 마련	• (19대 총선 공약)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하여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중소기업 정책 일원화
	•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노후시설 및 고객 편의시설 등 시설 현대화 사업 지속 추진(주차장, 아케이드, 화장실, 고객쉼터 등) – 대형마트·SSM과 경쟁할 수 있는 21세기형 전통시장 육성 : 문화관광형시장 등 특성화시장 육성, ICT 기반의 전통시장 지원 – 전통시장과 주변 골목상권을 함께 연계 지원하는 상권활성화 추진 –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및 상품권 사용 편의성 지속 추진	• (19대 총선 공약) '대형마트·SSM 규제'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회복 –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속 확충을 통한 쇼핑환경 개선(주차장, 아케이드, 고객편의시설 등) –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 및 특성별 맞춤형 지원 : 기존 전통시장에 문화, 축제, 관광이 결합한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을 육성하여 대형마트·SSM과 경쟁을 할 수 있는 21세기형 전통시장으로 대변화 모색 –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연계 지원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 (18대 대선 공약) 전통시장 활성화로 지역경제 회복 – 온누리 상품권 발행규모 확대하고 사용의 편의성을 높여 전통시장 활성화 –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주

정당	제20대 총선 공약	비고
		차장, 아케이드, 고객편의시설, 택배시스템, 냉난방시설, 안전시설 등 확충
	• 밭농업직불제를 100만원으로 인상 등 직불제를 확대 공약 – 밭농업직불금 100만원/ha으로 단계적 인상 – 조건불리지역직불금 100만원/ha으로 단계적 인상 – 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금을 10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 (18대 새누리당 대선 공약) 직불금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 • 고정직불금을 현재 ha당 7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인상
	• 렌트푸어 및 전세가구 공약 – (준)공공임대 공급확대 및 민간임대 등록제 도입으로 주거선택권 강화 – 준공공임대 지원강화로 전세물량 공급 확대 •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의 도입,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전월세 전환율의 적정수준 인하	• (19대 총선 공약) 전월세 상한제, 민간임대주택 등록제 도입으로 서민 주거안정 도모 –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및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 민간임대주택 등록제(등록계약임대주택) 도입
	• 100% 국가책임 0~5세 보육·교육 실천 공약	• (19대 총선 공약) 모든 0~5세 아동의 보육비용 전액지원으로 무상보육 실현
	• 초등부터 고교까지 실질적 무상의무교육을 실현 – 고교무상교육 실현 – 의무교육기관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 국가·지자체·교육청이 부담	• (19대 총선 공약) 고교무상의무교육 추진 • 의무교육기관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청이 공동으로 재정 부담
	• 한부모·조손가족 지원 강화 – 보육. 아동학습 지원, 생활가사 등에 대한 통합지원 프로그램 시행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및 대상 확대 – 비양육자의 양육비 이행 강화 조치 – 청소년한부모 학습권 보장 강화	• (18대 새누리 대선 공약) 한부모 가족과 청소년 한부모 가족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복지지원시스템을 일원화 •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를 월 5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확대 • 양육비 지급이행 효율화를 위해 이행강제기관 설치 및 법률서비스 제공
	• 난임 지원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난임 가정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 (19대 총선 공약)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 확대

정당	제20대 총선 공약	비고
	저출산 문제도 해결 –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대상과 범위 대폭 확대 – 난임시술에 동반되는 각종 검사와 투약 및 처치비용 등 필요한 항목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 불임으로 고통 받고 있는 가정으로 의료복지를 확대하여 출산율을 제고하여 근로의욕 고취
	• 시설 입소 장애인의 탈시설 과정을 돕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장애인 주거지원, 연금지원, 건강지원 확대와 ‘탈시설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자립지원금 지급	• (19대 총선 공약)지역사회 자립중심으로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 전환 – 탈시설·자립생활보장을 위한 5개년 계획 수립 – 정착금 지원, 주거비 지원 등
	• 여성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해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폭력예방교육 내실화, 폭력 처벌 강화, 지원센터 설치·운영	• (19대 총선 공약)여성폭력에 대한 예방 강화 – 성인지적 통합인권교육 의무화, 성폭력 처벌강화, 피해자 도움 및 보호제도 강화 등 • 여성폭력에 대한 처벌강화 및 피해자 지원 체계 개선
	• 직업군인의 복지 개선 – 군인의 정년 연장과 계급별 정년 단계적 폐지 추진 – 직업군인의 생활안정지원(전세자금, 격오지 수당 등)과 격오지 근무자 처우 및 자녀 학습 환경 개선 및 지원 등	• (19대 총선 공약) 직업군인 복지 향상 – 단기 부사관보다 장기 부사관 비중 확대 – 군인 주택 마련 실질적 지원 – 격오지 부대 교육(보육)비 지원
	• 과학기술 독립행정체계 강화하고 전담부처 부활 – 과학기술부 독립 설치, 과학기술 부총리제 회복 추진	• (19대 총선 공약) ‘과학기술부’ 부활 및 과학기술연구기관 활성화
	• 4대강의 수질악화 및 생태계 파괴 주범 대형보의 수문개방과 보철거 시범사업 및 4대강 재자연화 추진	• (19대 총선 공약) 4대강의 친환경적 재자연화 및 안전성보강 추진 • 4대강 수변구역 개발 저지 및 보전대책 마련
	• (사병들 처우개선 중)사병월급을 평	• (18대 새누리 대선 공약) 사병의 봉

정당	제20대 총선 공약	비고
	균 10만원 인상하여 단계적으로 월 30만원까지 인상 추진 – 제대 시에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퇴직금 제도 도입 • 군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 및 장병의 민간병원 이용을 확대	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병복무 보상금(‘희망 준비금’)을 단계적으로 지급 확대 • 장병의 민간병원 이용을 쉽게 하고 국방 의료 체계를 발전시킴
	• 소방과 해경의 현장대응능력을 높임 – 중앙소방본부를 ‘소방청’으로 개편 – 노후 장비 현대화 및 현장인력 보강과 인력의 정예화 – 119 기능 확대	• (19대 총선 공약) 소방의 대응능력 향상을 통한 국민안전 확보 – 소방방재청을 ‘소방청’으로 개편 – 노후 소방장비 현대화 및 개인안전장비 확충 – 119 기능 확대 – 사기진작 위한 처우 개선
	• 민생치안 역량을 대폭 강화 – 경찰인력 확충, 수사장비 현대화, 전문수사인력 양성으로 민생치안 강화 – 강력범죄나 반사회적 범죄 효율적 상시 소탕체제 구축 – 자율방범대 등 지원 강화	• (19대 총선 공약)민생치안 역량 강화를 통한 국민안전 확보 – 방범이나 순찰 등 경찰인력 확충, 수사장비 현대화, 전문수사인력 양성으로 과학적 민생치안기반 확충 – 강력범죄나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효율적 상시 소탕체제 구축 –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강화
	•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 – 보도, 제작, 편성의 자율성 확보 – 지상파 및 보도전문·종합편성채널의 소유지분 및 1인 소유지분 한도 축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 개편 및 심의규정 대폭 수정 – 해직 등 징계 언론인 명예회복과 언론탄압 진상규명 추진	• (19대 총선 공약) 언론의 정치적 독립 및 표현의 자유 회복 – 프로그램 제작, 편성의 독립성, 자율성, 책임성 확보 – 자본으로부터 방송독립 위해 소유지분 제한 – 해직, 정직 등 징계로 탄압받은 언론인 원상복귀 및 명예회복과 징계를 자행한 방송사 관계자들에 대한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 실시 –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폐지 등에 따라 ‘방송심의, 규제’ 관련 기구 독립화

정당	제20대 총선 공약	비고
	• 인터넷상 익명 표현의 자유 보장 – 인터넷 실명제 폐지 – 포털 등 인터넷 임시조치 중단 – 인터넷 도구에 의한 '표현의 자유' 보장 및 자율규제 원칙 정착 제도화	• (19대 총선 공약) 익명 표현의 자유 보호 – 인터넷실명제 원칙적 폐지 – 포털의 임시조치 제도 개선 – 소셜미디어를 통한 언로(言路)확보 : 소셜미디어에 의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고 자율규제 원칙이 정착되도록 제도화
국민의당	• 국민연금 양육크레딧 도입 – 출산 크레딧을 양육 크레딧으로 확대 (첫째아이부터 적용, 인정기간 확대)	• (민주통합당 19대 총선공약)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확대 – 출산크레딧 적용대상을 첫째 아이까지 확대하고 적용기간은 12개월로 인정함

※ 출처: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책공약집에서 발췌(2016. 4)

2. 정당 간 유사 공약

정당은 지향하는 이념과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공약 정책 또한 각 당 간에 차별성을 띄어 유권자들 각자가 자신의 정치적 이상과 가치에 부합하는 당에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제20대 공약 중 상당 부분 각 당 간 유사하여 유권자들로 하여금 판단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

'경력단절여성 지원' 공약은 제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에서 제시한 공약 이지만 이번 20대 총선에서 3당 모두 이 공약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어르신 일자리 확대', '맞춤형 노인복지', '장애인 이동권 개선', '공공임대주택 기능향상', '간병서비스 확대', '미세먼지정책', '신성장동력산업 발굴정책', 'FTA 피해농가 지원' 등이 3당 공약집 모두에 포함되어 있었다(**【표 2】 참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찜통 교실 등 교육환경 개선', '지방자치를 위한 중앙권한 사무 지방 이양', '여성·아동 폭력피해자 지원 인프라확대', '문화관광산업육성과 지역개발사업', '학자금 대출부담 경감 대책' 등의 공약은 여당인 새누리당과 야당인 더민주, 국민의당 둘 중 하나가 중복적으로 제시한 공약이다(**【표 2】 참조**).

야당인 더민주와 국민의당 간 유사공약으로는 '출산휴가정책', '민간기업에 청년 고용의무 할당', '대기업 이익공유', '국가정보원 개혁', '기초생활보장과 기

초연금제도 연계 폐지', '노인복지 위한 경로당 지원', '대학입학 전형에 스펙 축소' '대학입학 기회균등제 도입', '지역공동체활성화', '한부모지원정책', '동물보호시설확대', '환경정책 중 기금 마련' 등이 있다(**【표 2】 참조**).

【표 2】 제20대 총선 정당 간 유사 공약

연번	제20대 총선 공약	정당	공약 내용
1	경력단절여성 지원 정책	새누리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확대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더민주	• 경력단절여성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대 및 기능 확충
		국민의당	• 경력단절 여성에게는 재취업과 창업 등에서 필요한 교육과 상담기회를 제공하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와 같은 전달체계 사업을 강화하고 내실화
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새누리	•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확충
		더민주	• 국·공립 어린이집을 전체의 30%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보육의 공공성 제고
3	교육환경개선	새누리	• 찜통 및 냉동교실이 없는 에너지 자립학교로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 학교 전기요금 부담 완화
		더민주	• 노후학교, 찜통·냉동 교실을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로로 바꾸고 학교 전기요금 산정체계 변경을 통해 학교 전기요금 부담 완화
4	어르신 일자리 확대	새누리	• `17년~`20년까지 어르신 일자리 매년 10만 개씩 확대 공급 →(`20년) 78.7만개
		더민주	• 노인 일자리 당장 2배 수준(32만개→65만개)로 늘리고, 이후 일자리 수요 전체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100만개까지 확충 • 일자리 참여 수당을 현행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
		국민의당	• 어르신 일자리 2배 확대 • 어르신 일자리 수당 2배 확대 • 20만원→30만원→40만원으로 단계적 확대
5	맞춤형 노인복지	새누리	• 건강백세운동교실 : 경로당 등에 주 2회 60분 이상 운동강사 파견
		더민주	• 경로당을 여가·건강관리·교육 등 어르신 종합 복지서

연번	제20대 총선 공약	정당	공약 내용
			비스 제공 시설로 확대 개편
		국민의당	• 전국 경로당을 대상으로 건강 100세 운동교실 보급
6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 정책	더민주	• 시설 입소 장애인의 탈시설 과정을 돕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장애인 주거지원, 연금지원, 건강지원과 '탈시설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자립지원금 지급
		국민의당	•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일자리 확대, 장애인 의무교육 상향 등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경제적 자립 확대
7	장애인 이동권 개선	새누리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더민주	• 장애인특별교통수단 확대 등 통한 장애인 이동권 개선
		국민의당	• 장애인의 이동권 개선
8	출산휴가 정책	더민주	• 남성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현 5일 이내 3일 유급휴가→30일 이내 20일 유급휴가)
		국민의당	• 출산휴가 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아빠(배우자 출산휴가)는 2주로 확대
9	공공임대 주택 기능 향상	새누리	• 신혼부부 행복주택 특화단지 전국 확대 •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건설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행복주택 공급
		더민주	• 공공임대 공급확대 • 청년용 쉐어하우스 임대주택을 5만호 수준 공급하고 장기적으로 재고량 10만호를 유지하여 대학생, 청년의 주거난을 획기적으로 개선 • 공공임대 재고량의 1/3수준은 신혼부부에게 할당
		국민의당	•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희망임대주택' 공급 : 입주자격은 만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함
10	지방자치를 위한 중앙권한 및 사무 지방이양	새누리	• 중앙권한 및 사무의 적극적 지방이양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 추진
		더민주	• 중앙 권한의 지속적인 지방이전 등 지방분권을 강화

연번	제20대 총선 공약	정당	공약 내용
11	여성·아동폭력피해자 지원 인프라 확대	새누리	• 여성·아동 대상 폭력 예방활동 및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
		더민주	• 여성폭력 근절 및 예방 강화 •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아동보호시스템을 강화하고 안전대책 마련
12	간병서비스 확대	새누리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조기 확대를 위한 간호인력 수급대책 마련 • 당초 `18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대학병원과 서울 소재 병원에서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16년 4월로 앞당겨 시행, `16년 말까지 모두 400개 병원으로 확대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간병비 부담이 하루 1~2만원 수준으로 대폭 줄고, 보다 철저한 감염관리 등 입원서비스의 질 향상 예상
		더민주	• 모든 병원에서 간병서비스 제공토록 의무화하고, 간병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여 환자부담 획기적으로 절감 • 2016년에는 지방의료원을 포함하여 전국의 모든 공공병원부터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민간병원은 단계적으로 2018년까지 관련기준을 충족한 전국 모든 병원에 적용하여 환자간병으로 인한 국민의 걱정과 부담을 대폭 완화
		국민의당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조기 확대 시행
13	미세먼지정책	새누리	• 미세먼지 예보정확도를 제고하고 국내 대기질 특성을 반영한 한국형 예보모델 개발 추진 • 오염의 50%~70%를 차지하는 3대 국내 배출원(자동차, 사업장, 생활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축 정책 추진 • 중국 등 국외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실시간 대기질 측정자료 공유 등 연구 협력 강화
		더민주	• 미세먼지 측정망확대 및 전문 인력 보강과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 산업시설에 집중된 미세먼지 발생 우심지역에 대해서 특별관리 실시

연번	제20대 총선 공약	정당	공약 내용
			• 미세먼지 과다발생이 우려되는 교통량이 집중된 곳에 학교, 유치원, 요양시설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 기존 시설들에 대해서는 방음벽 설치, 공기청정기 보급
		국민의당	• 서해안남부지역, 휴전선지역, 백령도지역 등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유입되는 경로에 초미세먼지(PM2.5미만)를 관측할 수 있는 별도의 관측망 신규 확충 • 한-중간 대기분야 환경협력 강화 추진
14	민간기업에 청년 고용 의무 할당	더민주	• 향후 3년 간 한시적으로 일정규모 이상 민간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고용하도록 하는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도입
		국민의당	• 청년고용할당제 민간기업에 적용 • 5년간 한시적으로 공공기관 의무비율 5%로 상향 • 5년간 한시적으로 5% 청년고용할당제 민간기업으로 확대
15	신성장동력산업 발굴 정책	새누리	•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미래성장동력 육성 • 혁신적인 ICT 융합 확산으로 신산업 창출
		더민주	• 기후변화협약 등 온실가스 감축 대응 친환경 에너지 산업 육성 • 신산업기반 고부가가치 주력 제조업 육성 • 미래 ICT 전략산업 육성
		국민의당	• 미래형 신성장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먹거리 • ICT와 생명과학, 에너지, 신소재산업 등 미래형 신성장산업의 육성과 집중 투자 • 국가 R&D 투자 조정 통해 혁신과 융합기술 개발 기반 구축 • 신성장산업센터 설립 및 기금 조성 • 벤처투자환경 개선
16	문화관광산업육성과 지역개발사업	새누리	• 문화체험, 산악관광 인프라 조성, 지방관광 활성화, 교통 시스템(코리아 투어패스, K트래블 버스 확대) 구축 • 동북아 해양관광의 메카로 육성 • 요트, 수중관광, 해양레포츠를 모두 즐길 수 있는 권

연번	제20대 총선 공약	정당	공약 내용
			역별 종합해양관광지구 및 해양 관광 바닷길 조성
		더민주	• 21세기형 문화·관광산업 육성 • 문화 콘텐츠산업 및 전통문화와 해양문화가 함께하는 관광산업 육성, 지역테마형 해양관광지 및 해양관광특구 조성, 외래관광객 지방분산을 위한 지역전문 관광가이드제도 도입 및 광역별 관광콘텐츠 개발 지원 확대
17	FTA 피해 농가 지원 정책	새누리	• FTA 피해 최소화 및 피해농가 지원 확대
		더민주	• 밭 정비사업에 매년 2,000억원씩 10년간 2조원을 투자하여 FTA로 인한 밭농업 피해 최소화
		국민의당	•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포함한 농·어촌 상생기금 조성과 공유이익을 농·수산업 인프라 개선에 투자해 FTA 확대로 인한 농·수산업분야 피해 최소화
18	대기업 이익 공유	더민주	• 대·중소기업간 성과공유제의 확산 및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이익 증대
		국민의당	• 대기업의 이익을 협력업체와 분배 •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협력업체로 배분하여 공동이익을 극대화하는 계약모델 적용 • 성과공유제와 같은 방식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이익공유제도를 제도화하고, 세법을 개정하여 이익공유제도 도입 시 세제혜택을 제공하여 참여 유도
			※참고 (통합진보당 18대 대선 공약 "재벌개혁" 중) 원하청 초과이윤공유제 제도화 • 초과이익공유기금 조성과 활용 • 이익공유기금의 조세특례제한법 8조 3항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시행업체 세액 공제 등 인센티브 제공
19	국가정보원 개혁	더민주	• 국가정보원 개혁 • 테러방지법 개정·보완 • 수사권 및 국내보안 정보 수집권한 폐지 • 다른 행정부처에 대해 행사하는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권한 폐지 등
		국민의당	• 테러방지법 개정 • 테러위험인물 범위 제한

연번	제20대 총선 공약	정당	공약 내용
			• 국정원 이외의 조직이 집행 역할 담당 • 국정원이 금융위원장에게 직접 금융거래 지급정지 요청권을 갖는 것 삭제 • 국정원의 테러조사권은 조사참여권으로,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권은 동양파악권으로 축소
			※참고 (통합진보당 18대 대선 공약 "국정원 개혁" 중) 국가정보원 수사권의 폐지 • 국내정보 수집권한 제한, 기획조정권한 폐지 • 예산 및 정보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 국회정보위원회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보좌기구를 신설해야 함 • 정보감독위원회 같이 민간참여에 의한 국정원 통제도 병행함
20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연계 폐지	더민주	•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연계 폐지 • 기초연금의 빈곤 개선 효과를 고려한 합리적 연금액 수준 설정 및 단계적 인상방안
		국민의당	• 기초연금 수급자 확대 및 지급 요건 완화 •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폐지 • 어르신 1인당 노인복지예산을 한시적으로 향후 5년 동안 3% 증가율 유지
21	노인복지 위한 경로당 지원정책	더민주	• 독거노인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경로당을 취사, 목욕 등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
		국민의당	• 경로당을 쉐어하우스(Share House)로 탈바꿈 • 경로당 리모델링을 통해 조리시설, 건강의료기, 잠자리 등을 마련하여 공동숙소로 탈바꿈
22	대학입학 전형에 스펙 축소	더민주	• 대입에서 스펙 경쟁 유발하는 수상실적, 각종 인증 등 반영 금지
		국민의당	• 입학 전형 지원시 학생부에 적을 수 없는 각종 스펙 자료 제출 금지 등 간소화
23	대학입학 전형에 기회균등선발제	더민주	• 저소득계층과 지방 고졸생들을 위한 기회균형선발전형 확대

연번	제20대 총선 공약	정당	공약 내용
	확대도입	국민의당	• 기회균등선발제를 20% 수준으로 확대
24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대책	새누리	• 학자금 대출 금리 0.2% 인하(2.7%→2.5%) 통하여 청년 및 가계 부담 완화
		국민의당	• 학자금대출 금리를 현행 2.7%에서 1.5로 하향 조정
25	지역공동체 활성화	더민주	• 방과후학교 공익재단을 만들어 학교·지역사회가 함께 운영 • 방과학교의 책임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방과후 학교장 제도 도입 • 방과후학교에 지역 인력을 활용하여 질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
		국민의당	• 지역공동체 복원을 위해 학교시설을 활용 • 방과 후 교장제 도입 및 방과 후 종합지원센터 설치 • 지역공동체 활동을 위한 학교 시설 개방 확대 • 학교 내에 구역별 평생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학습동아리, 강사양성, 재능 나눔 프로그램 등 운영
26	한부모 지원 정책	더민주	• 한부모 지원 강화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및 대상 확대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확대 및 기능 보강 • 비양육자의 양육비 이행 강화 조치 마련 • 국가의 양육비 선지급 후 구상권 청구하는 양육비대지급 제도 도입
		국민의당	• 한부모가 양육비를 제대로 받도록 지원 강화 • 한부모 가정 초기지원과 비양육자의 양육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한부모지원센터의 기능강화 • 긴급양육비 지원예산 증액 • 비양육자의 양육비 이행 강제조항 강화
27	동물보호시설 확대	더민주	• 지자체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유기동물보호소 설치 • 유기동물보호소 지방자치단체 직영 운영 강화 • 각 지방자치단체 별 유기동물보호소 및 의료진 확충

연번	제20대 총선 공약	정당	공약 내용
		국민의당	• 지자체가 직영하는 유기동물보호소 확대 • 유기동물보호소의 지방자치단체 직영 운영 확대 및 민간위탁기관 지원·관리 강화 • 각 지방자치단체 별 유기동물보호소 및 의료진 확충
28	환경정책 중 기금 마련	더민주	• '석면피해구제기금'을 '환경피해구제기금'으로 확대하여 환경피해구제 사각지대 해소
		국민의당	• 환경으로 인한 피해구제 강화 : 환경피해구제기금 신설

※ 출처: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책공약집에서 발췌(2016. 4)

3. 선심성(포퓰리즘) 공약

일반적으로 포퓰리즘 공약은 재원조달 방안 등을 치밀하게 고려하지 않고 득표를 위해 선심성으로 제시하는 공약을 의미한다. 특히, 이번 총선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까지 각 당의 공천파동으로 인해 공약에 대한 충분한 정책적인 연구와 유권자 수렴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표(票)에 급급한 나머지 선거에 임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유권자에 대한 계약으로서의 구체적인 목표, 추진 우선순위, 이행방법, 이행기간, 재원조달방안을 명시한 공약을 제대로 제시하기에 역부족이었다.

새누리당은 '현재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등 공적지원사업을 통해 39%이상의 고교생이 입학금·수업료를 지원 받고 있으나 공평한 교육 기회 확대 제공'을 이유로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서벽지 등 교육 소외지부터 고등학생의 수업료·입학금, 학교운영 지원비·교과서 대금을 무상화하고 향후 전국적으로 단계적 확대 추진한다'고 했지만 재원 조달방안은 "국가 재정 상황에 따라"라는 단서로 유추해 보아 확실하게 추진할지의 여부가 의심된다. 또한 '어르신 일자리 매년 10만 개씩 확대', '신규 수출 중소 중견기업 1만개 육성' 등도 구체적인 이행방법 및 기간을 제시하지 못했다(**【표 3】** 참조).

더민주는 스스로 밝혔듯이 제시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약 147.9조원으로 연평균 29.6조원의 재원이 소요된다. 이는 새누리, 국민의당의 약 3배 수준이다. 더민주는 재원조달의 기본 방향을 '국민세부담의 급격한 증가 없이, 세출면에서 재정지출의 강력한 구조조정과 투자우선순위 재조정, 복지전달 체계의 개

선 등 재정개혁과 복지개혁을 통해' 마련한다고 했다. 또한 부자감세 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개혁과 조세제도 조정이라는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한 방법으로 재원이 확실히 조달 될지 의문이다.

더민주의 대표적인 선심성 공약은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30만원 차등없이 지급', '만20세가 된 청년에게 국민연금최저보험료를 정부가 3개월 동안 납부, 만30세가 된 청년 중 미취업자에 대해서도 3개월 동안 최저보험료 납부',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 미취업 청년들이 자기주도적 구직활동 시 6개월간 60만원 지급', '비정규직 사용부담제 도입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지원금 최대 1200만원 지원' 등이 있다(**【표 3】** 참조).

국민의당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세출예산을 조정하거나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에 의한 증세라고 밝혔다. 단순히 예산을 조정하거나 결국은 증세를 통해 재원을 충당한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공약 중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누리과정 국가예산'은 12.5조가 소요되고, '기초연금'은 4조2500억, 노인일자리 창출은 4조, 농어업 지원에는 5조가 소요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 이행방법 및 재원조달 방안은 회의적이다(**【표 3】** 참조).

【표 3】 제20대 총선 공약 중 선심성 공약

정당	선심성(포퓰리즘) 공약	비고
새누리	• 고교 무상교육 실시	재원조달방안 미흡
	• 어르신일자리 확대 : 2017년~2020년까지 매년 10만개씩 공급	구체적 이행방법 및 이행계획 미흡
	• 신규 수출 중소·중견기업 1만 개 육성	
더불어 민주	• 보육예산을 100% 중앙정부가 담당하여 보육에 대한 책임성을 명확히 하고 연례적인 반복되는 보육 중단 위기를 해소 – 만0~2세 영아보육료 및 만 3~5세 어린이집 누리과정, 만0~5세 가정양육수당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국가 부담	구체적 이행방법 및 이행계획 미흡
	• 청년전용 창업자금, 모태펀드의 청년계정 신설 등을 통해 성장 잠재력이 뛰어난 청년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 지원 – 청년전용 창업자금 : (2016년), 1,000억 원	재원조달방안, 구체적 이행방법 및 이행계획 미흡

정당	선심성(포퓰리즘) 공약	비고
	•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청년안전망(Youth Guarantee)도입 –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 미취업 청년들이 자기주도적 구직활동 시 취업활동지원(6개월 간 60만 원 지급)	재원조달방안 미흡
	• 만20세가 된 청년에게 국민연금 최저보험료(월2만4천원)를 정부가 3개월 동안 납부(성년축하 연금가입지원), 만30세가 된 청년 중 미취업자에 대해서도 3개월 동안 최저보험료 납부(취업장려 연금가입지원)	재원조달방안 미흡
	• '비정규직 사용 부담금제' 도입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금' 최대 1,200만원(1인) 지원	재원조달방안 미흡
	•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30만원을 차등 없이 지급	재원조달방안 미흡
	• 노인 일자리를 당장 2배 수준(32만여 개→65만 개)으로 늘리고, 이후 일자리 수요 전체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100만 개까지 확충 • 일자리 참여 수당을 현행 월 2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	구체적 이행방법, 재원조달방안 미흡
	• 고혈압, 당뇨 등 노인의 대표적 만성질환 관련 약값 본인부담금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경감	재원조달방안 미흡
	• 남성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 현 5일 이내 3일 유급휴가→30일 이내 20일 유급휴가 • 육아휴직 급여 인상 – 현 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으로 인상	구체적 이행방법 및 재원조달방안 미흡
	• 밭농업직불제를 100만원으로 인상 등 직불제를 확대 – 밭농업직불금 100만원/ha으로 단계적 인상 – 조건불리지역직불금 100만원/ha으로 단계적 인상 – 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금을 10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재원조달방안 미흡
	• 밭 정비사업에 매년 2,000억원씩 10년 간 2조원을 투자하여 FTA로 인한 밭농업 피해를 최소화	재원조달방안 미흡
	100원 택시 도입 등 농어촌복지 향상 • 농어촌지역 교통 불편 해소 – **'100원 택시'** 등 농촌형 택시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교통	구체적 이행방법 및 재원조달 방안 미흡

정당	선심성(포퓰리즘) 공약	비고
	사각지대 해소 – 농어촌지역 65세 이상 어르신의 대중교통 버스 무료 이용 실현	
국민의당 (4건)	• 새마을금고, 신협 등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영세 자영업자가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한 고금리 대출을 전환하도록 함	재원조달방안 미흡
	• 어르신 일자리 2배 확대 : 2016년 29.8만개에서 2020년 60만개로 단계적 확대 • 어르신 일자리 수당 2배 확대 : 20만원→30만원→40만원	구체적 이행방법 및 재원조달방안 미흡
	• 후납형 청년구직수당 도입 – 구직활동 중인 청년들에게 6개월 간 월 50만원씩 총 300만원의 구직급여 지급 – 수급자들은 취업 후 4년간 할증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원금을 상환해야 함(2.5%, 후납상한액은 250만원으로 제한)	재원조달방안 미흡
	• 장애인 지원, 안전한 수돗물, 농어업 지원, 기초연금 등	재원조달방안 미흡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누리과정 국가예산: 12.5조 소요	구체적 이행방법 및 재원조달방안 미흡
	•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들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사용자(파견 및 용역의 경우 근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전액부담하도록 함	재원조달방안 미흡

※ 출처: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책공약집에서 발췌(2016. 4)

4. 이색 공약

이색공약은 취지는 좋으나 공약의 실현가능성이 낮거나, 현 정부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 소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의 이해관계 반영하여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킬 가능성을 내포한 공약들이다.

새누리당의 경우, 사회적 기업에 대한 민간자본 조달체계구축을 통한 자생력 확보 및 사회적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 개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거래소 설

립을 추진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그리고 '대기업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며 '대기업 총수에게 해외 계열사 현황 등 공시의무 부과'한다는 공약이 있다. 이 두 공약 모두 대한민국 헌법가치인 '자유시장경제체제'와 반하는 공약으로 헌법가치를 수호해야 할 여당으로서 이치에 맞지 않은 공약으로 판단된다(**【표 4】** 참조).

또한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정치 실현' 으로 국회선진화법 개정, 무노동·무임금,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의원입법생산성 제고 등 정치 개혁을 위해 시급히 이루어야 할 공약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런 공약들은 매번 선거철과 정치개혁 과제로 수없이 등장 했지만 실제적인 개혁 움직임과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구색맞추기용 공약으로 판단된다.

더민주의 '국정원 폐지' 공약은 현 북한의 연이은 무력도발과 시위, 북한의 공개적 테러의 위협에서 정보기관을 폐지하자는 것은 다소 엉뚱한 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대테러법의 핵심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공약은 급변하는 통신환경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범죄 수사와 방지를 어렵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집회시위 자유를 확고히 보장'한다는 공약은 불법시위 및 잦은 집회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국민들을 외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개성공단 정상화', '역사교과서 검정화 재추진' 등은 현 정부 정책과 정면으로 반하는 공약이므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등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공약이다. '정당의 고액 특별당비 내역 인터넷 공개' 공약은 취지는 좋으나 각 당에서 얼마만큼 협조할지 의문이다(**【표 4】** 참조).

국민의당의 '지역민방위제도 폐지' 공약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국내 농·수·축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이득공유제를 도입 공약은 이미 시행 중이라 공약으로서 유효한지 의문이다(**【표 4】** 참조).

【표 4】 제20대 총선 주요 정당 이색 공약

제20대 총선 이색 공약	정당	비고
• **사회적 기업 활성화/ 사회적 기업법**	새누리/ 더민주	- 반시장적 공약
• **대기업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해외 계열사의 소유지분 현황, 주식소유현황 등 공시 의무 부과	새누리	- 반시장적 공약
•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정치 실현**: 국회선진화법 개	새누리	- 선언적 공약

제20대 총선 이색 공약	정당	비고
정, 무노동·무임금,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의원입법생산성 제고		- 공약 실현 가능성 및 실현 방법 미흡
•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표심 공략 의혹
• **지역민방위대를 폐지**: 자영업자와 영세기업 근로자들의 불편을 해소, 직장인민방위대는 존치	국민의당	반안보, 시기상조 논란 등
• 국내 농·수축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이득공유제**를 도입: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포함한 농·어촌상생기금 조성, 공유이익을 농·수산업 인프라개선에 투자	국민의당	2012년에 이미 특별법을 통해 시행되고 있음
• **집회 시위의 자유를 확고히 보장**: 현행 관할 경찰서에 집회 시위의 장소를 신고하던 것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변경, 10인 이하의 소수가 확성장치(휴대용 포함)를 사용하지 않고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집회 시위 장소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집회 시위의 금지 장소도 축소함	더불어민주당	- 불법시위 및 집회 과잉 논란
• **국정원 폐지**: 국가정보원을 폐지하고 대북 정보 및 해외정보를 담당하는 '통일해외정보원(가칭)'으로 개편	더불어민주당	- 반안보/ 제19대 국회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 발의 법안과 동일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통신제한조치 요건 강화, 긴급통신제한조치 남용방지, 통신자료 제공에 영장주의 도입 등	더불어민주당	- 통신환경변화와 효율적인 수사 및 범죄 방지와 반대되는 방향의 법 개정으로 논란 예상
• **개성공단 정상화**	더불어민주당	- 현 남북관계와 대북 정책 방향과 거리
• **과거사에 대한 완전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추진과 국가폭력 피해자 지원**	더불어민주당	- 이미 위원회 활동 종료로 진실규명된 사건이 있는 등 사회적 합의 필요
•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더불어민주당	- 사회의 합의 필요
• **정당의 고액 특별당비 내역 인터넷 공개**	더불어민주당	- 당위성은 있으나

제20대 총선 이색 공약	정당	비고
		실현가능성 회의적
• **역사교과서 검정제로 되돌림**	더불어민주당	- 국가 정책과 반대. 논란 예상
• **반려동물 등에 대한 동물복지시스템을 강화**: 지자체별 반려동물 전용 놀이공간 설치 추진	더불어민주당	- 국민 전반에 대한 보편적 필요성 결여

※ 출처: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책공약집에서 발췌(2016. 4)

Ⅲ 결론

주요 정당이 제20대 총선을 위해 제시한 공약을 분석한 결과, 역대 총선보다 정책 대결이 부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법정시한을 넘긴 선거구 획정, 여야 공천 파동 등으로 인해 각 당은 정책 공약의 연구 및 개발에 소홀 할 수밖에 없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선거철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재탕공약', '중복공약', '선심성 공약', '이색공약'이 주를 이루고 있다.

2006년도부터 도입된 매니페스토(Manifesto) 정책선거, 즉 선거에 임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유권자에 대한 계약으로서의 구체적인 목표, 추진 우선순위, 이행방법, 이행기간, 재원조달방안을 명시한 공약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를 위한 현실적 개선 방안으로는 「공직선거법」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공천시기와 후보 공약 제시의 구체적 시기 및 내용을 「공직선거법」을 통해 명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정당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등의 현실적 조치가 대안이 될 수 있다.